

'장애인정책의 나침반'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걸어온 길, 나아갈 길



장애인정책리포트

월간 **한국장총** 2022.12.30. _ Vol.426

함께하는 회원단체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한국장르장애인협회, 한국한센총연합회,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전국신장장애인단체연합회,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장애인문화예술진흥개발원,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광주장애인총연합회,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울산장애인총연합회, 강원도장애인단체연합회, 충청남도장애인단체연합회, 충청남도장애인단체연합회, 전라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경상북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경상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단체연합회,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장애인정책의 나침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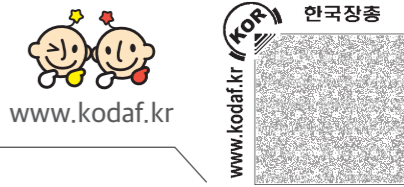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걸어온 길, 나아갈 길

글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혜진

대한민국 정부는 1998년부터 5년마다 장애인정책에 대한 중장기계획인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장애계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 수립단계에서 총27개 장애인단체가 연대하여 정부에 총73개의 과제를 선도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마지막 해인 올해에는 총 36개의 장애인단체가 참여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장애인단체 TF'가 조직되어 장애당사자 관점에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이행 결과를 평가하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에 앞서 정부에 6대 정책목표와 23개 중점과제, 108개 실행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정책리포트는 6차 계획 수립을 앞두고 지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주요 추진 성과를 살펴보고, 5차 계획에 대한 평가와 6차 계획에 거는 기대와 우려를 정리하고자 한다.



01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걸어온 길

■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어떻게 시작됐나

◆ 김영삼 대통령, 삶의 질 세계화 선언 후 1998년 최초의 범정부 차원 장애인정책계획 수립

- 1995년 김영삼 대통령은 『삶의 질 세계화』 선언을 발표하고, 세계화의 과제로 ①정확한 미래투시, ②명확한 목표설정 ③차세대를 위한 대책 수립을 강조하였음



KBS 9시 뉴스화면(1994.11.17)

- 이를 계기로 장애인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추진하게 되었음

- 1996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과 추진을 결정하고, 1998년부터 범정부 차원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함
- 장애인과 고용 관련 단체, 학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1998년 최초의 중장기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만들어짐
- 이후 1998년부터 5년마다 장애인과 고용 관련 단체,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 각 부처가 협력하여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함
- 2012년 1월 26일 일부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에 따라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시행됨(1차(1998~2002), 2차(2003~2007), 3차(2008~2012), 4차(2013~2017), 5차(2018~2022))

■ 1~5차 종합계획 변천사 훑어보기¹

◆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1998~2002) "중장기 계획의 첫 걸음을 떼다"

표1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추진 개요

구분	제1차(1998~2002)	제2차(2003~2007)	제3차(2008~2012)	제4차(2013~2017)	제5차(2018~2022)
비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 보장	장애인이 대등한 시민으로 참여하는 통합적 사회 실현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참여 확대와 통합 사회 구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장애인의 자립 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
정책 목표	가족·이웃·지역사회가 장애인과 함께하는 복지 실현	① 생애주기별 특화된 복지 서비스 개발·제공 ② 통합교육 확대 ③ 안정적 장애인 고용 실현 ④ 디지털 복지사회 구현 ⑤ 장애인 이동편의체계 구축	①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선진화 구현 ② 생애주기별 교육 지원 체계 구축 및 문화활동 확대 ③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사회 실현 ④ 장애 통합적 접근으로의 사회참여 확대와 장애인 권익 증진	① 장애인 복지·건강 서비스 확대 ②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 강화 및 문화·체육 향유 확대 ③ 장애인 경제 자립 기반 강화 ④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 증진	① 지역사회 삶이 가능하도록 복지·건강서비스 지원 체계 개편 ② 교육, 문화, 체육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원 체계 강화 ③ 장애인도 더불어 잘 살기 위한 경제 자립 기반 강화 ④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권익 보장 ⑤ 동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세부 과제	3대 분야 71개 세부 과제	7대 분야 103개 세부 과제	4대 분야 58개 세부 과제	4대 분야 71개 세부 과제	5대분야 70개 세부 과제
참여 부처	3개 부처	5개 부처	12개 부처	12개 부처	12개 부처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8. 3. 5.),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2018~2022), 참고 자료 재구성

¹ 김성희(2018),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현황과 발전 방안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현황과 발전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18년 4월 통권 제258호, pp.62-71



- 의의: 우리나라 최초의 중장기 장애인복지정책으로 보건복지부, 교육부, 노동부 3개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해 오던 장애인 관련 업무를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추진

년도	범주	장애유형
1989년	5개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2000년	10개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2003년	15개	10개유형 +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뇌전증장애

장애범주 확대(1989~2003년)

- 주요성과: 1단계 장애 범주 확대(5개 유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을 활용한 장애인 고용 지원, 장애인의무고용제 강화, 특수학교 확대, 편의시설 확충
- 한계: 여성 장애인 대책,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의 부족, 장애인단체의 참여 부족

◆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2003~2007) “구체화된 계획으로 양적성장 시도”

- 의의: 재정 소요액 추정 및 연차별 투자 계획, 제도 개선 계획, 생애 단계별 계획 마련 등으로 구체성을 강화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결의대회’ (2006.3.29.) © 오마이뉴스 윤보라

- 주요성과: 제2차 계획의 시행 결과, 2단계 장애 범주 확대(5개 유형), 장애수당 지원 대상 및 급여액 확대, 활동보조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체 범위 확대 및 표준사업장 도입, 장애아 무

상보육료 지원, 문화바우처 도입,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서명,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한계: 장애인복지제도의 양적 성장은 이루어졌으나 수요자 중심의 정책 개발과 효율적 시스템 구축의 미흡,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가입 등 장애인 권리 기반 정책 요구에 대응하는 정책 부족, 계획의 각 과제 간 우선순위 미설정

◆ 제3차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2008~2012) “복지에서 정책으로! 2009년 UN CRPD 비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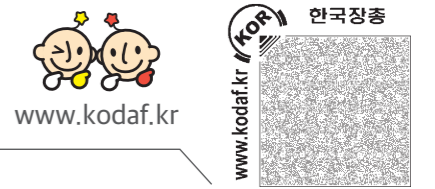
- 의의: 이전 계획에 비해 범위가 범정부 차원으로 확대되어 ‘장애인복지’에서 ‘장애인정책’ 전반으로 확대, 우선순위에 따라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 과제별로 성과 목표를 설정

<p>장애인 복지 선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등록관리체계 선진화 · 기초장애연금제도 도입 · 장애인 주택서비스 확대 등 15개 과제 		<p>장애인 경제활동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운영강화 · 정부의 장애인 고용 선도적 역할 · 장애인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 개발서비스 제공 등 10개 과제
<p>장애인 교육문화 증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계 구축 · 통합교육 강화 · 문화바우처 사업, 생활체육사업 등 16개 과제 		<p>장애인 사회참여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차법 홍보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내실화 · 장애인 헬스케어 제도 등 17개 과제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 4개 분야별 주요 과제

- 주요성과: 장애인연금 도입, 발달장애인 지원 계획 수립,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장애 아동 의무교육 확대, 문화바우처사업 확대,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강화,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지정·운영 그리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및 발효(2009년)

- 한계: 장애인정책 분야별 법·제도의 기본 틀은 갖추었으나 부처 간 유기적 연계 부족, 장애인 연금제도 도입 등에 따른 생활 안정 지원 이외 고용, 문화 등 다양한 정책 분야의 충족도 미흡, 성과 지표의 미개량화에 따른 추진 실적 평가의 어려움



◆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 “등급제폐지와 맞춤형서비스를 위한 발돋움”

- 의의: 장애인정책 예산의 지속적 확대, 장애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 체계 시범사업 실시, 활동지원서비스 수급 자격 확대,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및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장애인연금 확대 및 인상,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와 함께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한국수화언어법」 및 「점자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농아인계 ‘환영’ ©비마이너(2016. 1. 4. 기사)

- 주요성과: 특수학교(급) 확대 및 고등교육 지원 확충,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확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및 복지일자리 확대, 진솔조력인제도 도입

- 한계: 부처별 추진 정책의 유기적 연계 부족, 초기 단계인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의 지속적인 대책 마련, 특수교육의 질적 개선,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민간 및 부처 간 협력과 고용 유지, 재난 대비 안전교육 등의 필요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 “장애계 제안과제를 정책에 담다”

- 의의: 장애인정책의 기획, 집행, 평가 등 전 과정에 장애계의 적극적 참여지원, 주요 장애인정책 분야 별로 장애계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 및 운

영, 장애계의 제안 과제(장애인의 탈시설 실현,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개선 등)를 추진 과제에 반영



장애등급제 폐지 관련 보건복지부 장관 브리핑 ©헬스포커스

- 주요성과: 장애등급제 폐지, 정책지원대상 및 예산확대, 인프라 접근성 확대, UN CRPD 선택의정서 비준

- 한계: 근본적 제도 개편을 내포한 장애등급제 폐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체계 등 장애계가 제안한 주요 과제의 시행이 지연되거나 일부 이행에 그침

◆ 제5차 계획, 양적 성장은 이뤘지만, 당사자 권리 반영은 아직

-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1998년부터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주요 비전과 목표를 세우는 장애인정책의 나침반역할을 해왔음. 각 단계를 거치며 정책목표와 세부과제가 구체화되었고 참여부처가 늘어나는 등 양적인 성장이 이루어짐. 그러나 여전히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와 권리에 기반한 맞춤형 정책 수립과 수행성과는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02 장애계, 5·6차 계획에 확성기를 들다!

5차계획: 장애계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종합계획에 장애계의견 공식 첫 반영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어디까지 왔나? 이행평가 토론회(2021. 12. 15.)

- 2018년부터 수립·시행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 2022)은 계획안 마련을 위해 전문 연구기관(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위탁하여 진행하는 연구용역 전 장애인 당사자 참여 보장을 위해 장애계 주도의 기초 연구가 먼저 실시되었음
-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문헌조사와 더불어 장애인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등록체계 개선, 의사소통지원, 탈시설 지원 등 70여개 세부과제가 포함된 '제5차 종합계획 과제안'을 제안함. 본 제안을 바탕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위탁을 받아 장애인 관련 전문가, 장애인단체 실무자 등으로 6개 분과를 구성하여 '장애인정책종합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5월부터 12월까지 수행하고, 제4차 계획 평가, 5차 계획의 정책방향 및 분야별 추진과제 등을 논의하였음
- 연구 마무리 단계에서 관계 부처 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및 협조, 분야별 과제 안에 대한 부처 의견 조화 및 자문회의를 실시하였고 해당 연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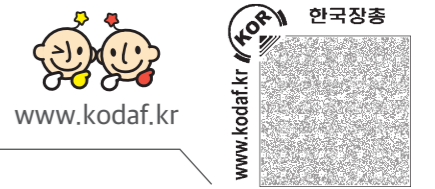
- 바탕으로 제5차 계획을 도출함
-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 사이에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에 대한 관계부처의견 수렴이 진행되었고, 2018년 2월에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됨
- 해당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 일부를 반영하여 수정한 안을 2018년 3월에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 및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지음
- 이처럼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은 1년 이상의 시간 동안, 장애인단체 중심의 과제 도출 연구, 전문가 및 현장 중심의 계획안 도출 연구, 관계부처 논의를 통한 최종 확정 단계까지 거친 계획임
- 장애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21년 12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어디까지 왔나? 이행평가 토론회'를 개최하여 장애인관점의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이행평가 결과를 확산하였음

6차 계획: 더 다양한 목소리를 더 크게! 단체제안 정례회를 위한 발돋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5개년)에 정책 제안 위한 '단체TF 회의' (2022.6.20.)

- 장애계는 이번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도 장애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그 회원단체를 비롯하여 총 36개의 장애인단체와 이동석 교수(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책임연구위원으로 참여한 '제6차 장애인정책중



- 합계획 수립을 위한 장애인단체 TF'(이하 제6차계획 TF)를 조직함
- 제6차계획 TF는 6월 20일 1차 회의를 개최하고 3개월간 매달 회의(2차 - 7.11, 3차 - 8.4.)를 개최하여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평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기본방향, 분야별 보완과제를 논의하였음
- 8월 18일에는 TF 미참여 단체를 포함한 장애계 의견수렴을 통한 TF(안) 확정하여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단체 간담회를 개최함. 또한 선제적으로 정부 실무추진단 사무국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장애계의 초안을 공유하고 총괄위원회를 통해 장애계 제안과제를 검토한 바 있음
- 9월 발간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에 대한 보고서」에는 “장애인의 자유와 평등, 존엄성이 실현되는 사회”라는 비전하에 “다양성 존중과 동등한 시민권 보장을 통한 지역사회에서의 자유로운 자립생활”을 목표로 6대 정책목표 23개 중점과제 108개 실행과제로 구성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을 수립하고 이를 정부계획에 반영하도록 촉구함
- 이번 제6차계획 TF는 지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당시보다(27개 단체, 73개 추진과제 제안) 참여 규모나 과제 수가 대폭 늘어나 장애인단체별로 주장하는 현안 과제의 집대성으로 볼 수 있음

☑ 장애인 관점 담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118개 과제 중 68개(57.6%)에 장애계 의견반영 성과



제2차 장애인리더스포럼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방향을 논하다'(2022.9.7.)

- 장애인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및 대안제시를 통해 정부와 비판적 동반자 역할을 수행해야함
- 기존에 정부가 실시한 자체평가는 추진과제별 성과목표의 잦은 변경과 변경에 대한 불명확한 사유 등의 문제가 있었고, 변경된 성과목표에 기반한 평가가 진행되었음
- 이에 제6차계획 TF는 정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의 진행 상황 및 성과 등을 정부 정책의 직접 대상자인 장애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향후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의 과제와 방향성을 제시하는 연구를 실시하여 지난 9월 보고서를 발간함
- 보고서를 통해 장애계는 “장애인의 자유와 평등, 존엄성이 실현되는 사회”를 비전으로 “다양성 존중과 동등한 시민권 보장을 통한 지역사회에서의 자유로운 자립생활”을 정책목표로 제시하였음
- 분야별 정책목표와 6대 정책목표, 23개 중점과제, 108개 실행과제내용은 아래와 같음

정책 목표	중점 과제	실행과제
1. 실질적인 평등 구현을 위한 정책구조의 전환		
1-1. 장애 개념 수정 및 장애인 정책 참여 활성화		
	1-1-1. 장애 정의 수정, 장애판정 도구 개정, 장애 유형 개편	
	1-1-2.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1-1-3. 지방자치단체별 장애인복지위원회 활성화	
	1-1-4. 선거에서의 장애인 선거권 보장	
	1-1-5. 장애통계의 장애인 비교항목 구성	
	1-1-6. 장애인예산 OECD 평균 수준으로 증액	
	1-1-7. 장애인 비례대표 등 정치참여 보장	
1-2. 장애인소득보장체계 전면 개선		
	1-2-1. 장애인 기본소득 또는 장애인표준소득 보장제도 도입	
	1-2-2.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대 및 부가급여 현실화	
	1-2-3. 발달장애인 국민연금 수급연령 하향	
	1-2-4. 탈시설정착금 지급 및 재가장애인 자선형성지원제도 도입	
	1-2-5.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보장	
1-3.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 방식 전면 개편		
	1-3-1.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도입	
	1-3-2.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	
	1-3-3. 장애인동료상담사 국가자격화 도입	
	1-3-4. 장애인전담협의체 내실화 및 사례관리 지원체계 제도화	
1-4. 돌봄제공자 지원체계 강화		
	1-4-1. 돌봄제공자 지원 강화: 돌봄법 제정 등	
	1-4-2. 긴급돌봄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365 쉼터 설치	
	1-4-3. 가족휴식지원제도의 확대와 의무화	
	1-4-4. 장애아동 가족의 경제적 지원 확대	
2. 평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람중심 지원 확대		
	2-1. 정신장애인 지원 강화	

2-1-1.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2-1-2.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신재활시설 확충	2-1-3. 정신장애인 위기심터 설치를 통한 지원체계 강화	2-1-4. 중증정신장애인을 위한 위기지원체계 및 복지서비스 확충
2-2.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			
2-2-1. 발달장애인의 '성적 권리보장&실현'을 위한 지원책 마련	2-2-2. 발달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한 24시간 지원체계 마련	2-2-3. 도전형동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2-2-4.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지원서비스 및 특별수요신탁제도 도입
2-3. 고령장애인 및 장애를 가진 부모 지원체계 마련			
2-3-1. 고령장애인을 위한 쉼터, 요양시설 등 지원 확대	2-3-2. 장애를 가진 부모 서비스 지원 확대	2-3-3.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양육, 지원 확대	
2-4. 내부장애인 지원체계 강화			
2-4-1. 장무인을 위한 종합복지관, 요양원, 쉼터 등 설립	2-4-2. 장루(오루)치료재료 건강보험 급여 개정	2-4-3. 신장장애 이동지원	2-4-4. 신장장애인 감염병 지원체계 마련
2-5. 뇌병변장애인 지원체계 강화			
2-5-1. 뇌병변장애인권리지원정책 수립	2-5-2.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 및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2-5-3. 뇌병변장애인의 이차장애 예방 및 의료비 경감	
2-6. 청각 및 시각장애인 지원체계 강화			
2-6-1. 시각장애인지원센터 설치	2-6-2. 시각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 설립	2-6-3.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 건립	2-6-4. 안마기술의 건강보험급여 및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추가
2-6-5. 한국수어 인식 개선 및 통역사 자격시험 개편			
2-7. 중도 중복장애인 지원체계 강화			
2-7-1. 중도장애인 전환재활시스템 구축	2-7-2. 중복장애인 복지 지원 강화		
3. 지역사회 통합생활을 위한 실효적 지원 강화			
3-1. 탈시설·탈원화 체계 구축 및 주거서비스 강화			
3-1-1.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인의 탈원화 로드맵 구축	3-1-2. 탈시설 및 자립지원 체계 구축	3-1-3. 탈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 안정성 강화	3-1-4. 적절한 주거기준 마련 및 주거급여 확대
3-1-5. 주거마련 전용 대출제도 신설 및 주거비 지원 강화	3-1-6. 재가 중증발달장애인·고령장애인의 주거서비스 지원	3-1-7. 정신장애인의 주거서비스 지원	
3-2. 이동과 편의에서의 다양성 고려 및 실효성 제고			
3-2-1. 교통수단 확충 및 접근성 제고	3-2-2. 특별교통수단 확충 및 지역간 이동성 제고	3-2-3. 여객시설 및 보행환경의 이동편의 개선	3-2-4. 편의시설 비의무 대상 의료기관의 편의시설 설치
3-2-5. 장애인화장실 설치 및 이용가능성 제고	3-2-6. 공동주택용 장애인 편의시설 접근성 제고	3-2-7. 편의시설 설치 및 이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3-3. 활동지원서비스 내실화 및 지원 확대			
3-3-1.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3-3-2.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기준 개선	3-3-3. 서비스 유형 및 제공인력 다양화	3-3-4. 활동지원서비스 행위별수가제 도입
3-3-5.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개선	3-3-6.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개편 및 확대		
3-4. 체육, 관광, 예술, 문화 생산과 향유를 위한 기반 구축			
3-4-1. 생활체육 참여를 위한 지원 강화	3-4-2. 장애인 관광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3-4-3. 장애인 예술 교육 지원 및 교육시장의 활성화(블록체인 기반)	3-4-4. 장애인 예술가 중심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3-4-5. 예술·문화활동 향유권 증진			
4. 포용을 위한 디지털 접근성 실현			
4-1. 디지털접근의 평등성 강화			
4-1-1. 다양성을 고려한 디지털 접근성 개선 및 역량 교육 강화			

4-1-2.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제고	4-1-3. 멀티미디어, OTT 등 정보접근 기반 구축	4-1-4. 광고에서의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강화
4-2. 장애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디지털 기술 개발		
4-2-1. 서비스, 스마트도시 등 디지털 신기술 적용		
5. 자유 실현을 위한 생명과 안전의 보장		
5-1. 장애인의 건강권 강화를 위한 체계 구축		
5-1-1. 보조기기 지원 다양성·보편성·접근성 강화	5-1-2. 의료급여 부양의무제 폐지	5-1-3.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장애통합공공의료전달체계 구축
5-1-4.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민주적인 거버넌스 구축	5-1-5.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의 실효성 강화	5-1-6. 장애인 건강권법 건강관리사업 고도화
5-1-7.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5-1-8. 장애인 의료비 상한제 도입	
5-2. 재난과 폭력·학대로부터 장애인 인권 보호		
5-2-1. 장애인 재난안전 전담부서 설치 및 종합정책 수립	5-2-2.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 정책에 장애인 고려	5-2-3. 학대피해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5-2-4.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 기능 강화	5-2-5. 여성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확충	5-2-6. 학대피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6. 동등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적극적 지원 강화		
6-1.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		
6-1-1. 장애인 평생교육 권리보장	6-1-2. 장애인 고등교육 권리보장	6-1-3. 통합학급 중심의 통합교육 강화
6-1-4. 특수교육 지원체계 개편	6-1-5. 여성장애인 교육기회 확대	6-1-6. 청각장애인 교육지원체계 구축
6-2. 장애인 교육의 직업 연계 강화		
6-2-1. 장애인교원 양성 및 채용 확대	6-2-2. 특수교육·평생교육과 고용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 체계 구축	
6-3. 장애인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		
6-3-1. 장애인창업 활성화 및 장애인기업 유지책 마련	6-3-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개선	
6-4. 장애인 노동시장 참여 확대		
6-4-1. 사업체의 장애인 채용 유도	6-4-2. 장애인의무고용제도 강화	6-4-3. 장애인 채용 공고방식 수정
6-4-4.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제도화	6-4-5.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일반고용 시장 전이	6-4-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 강화 및 지원 확대
6-4-7.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간 네트워크 구축	6-4-8. 발달장애인 고용제도 실효성 강화	6-4-9. 장애인근로기준법 제정

- 2022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차 총괄위 자료에 따르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118개 세부 추진과제 중 장애인단체 제안이 반영된 비율은 68개(57.6%)임. 장애인단체가 제안한 108개의 과제를 기준으로 하면 52개(48.1%)가 반영됨

- 장애인 관점에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시에 장애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수립

방향성이 도출되었다는 점이 제6차계획 TF 핵심 성과라고 할 수 있음

03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 줄었을까?

■ 제5차 종합계획의 주요내용과 추진결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평가는? 2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비장애인과 격차 없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장애인정책 추진함
-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Inclusive Society)'를 비전으로 사회 전 영역을 망라하는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 추진함. 주요 전략은 아래와 같음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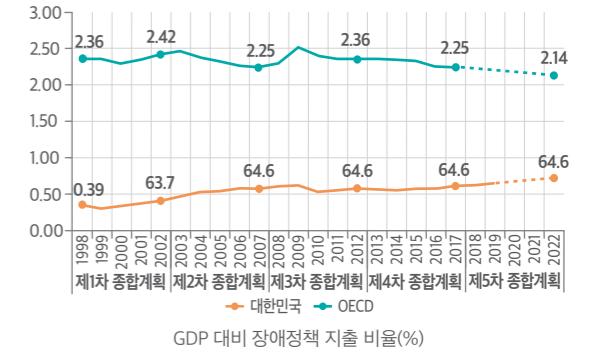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 완화

5대 분야 / 22개 중점과제 / 70개 세부과제

복지·건강 지원체계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권리보장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 탈시설 및 주거지원 강화 ✓ 활동지원 내실화 등 복지서비스 확대 ✓ 재활의료 전달체계 구축 및 접근성 강화 ✓ 장애인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교육·문화·체육 기회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영유아 보육·교육 지원 강화 ✓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 위한 특수교육 기반 강화 ✓ 진로 및 평생교육 지원 강화 ✓ 문화·예술 활동 및 관광·여가 향수 기회 보장 ✓ 장애인 체육·스포츠 향유 기회 보장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소득보장 급여 개편 ✓ 소득보장과 고용지원서비스 연계 강화 ✓ 고용서비스 및 직업재활 지원 강화 ✓ 장애인중소벤처기업 지원 	권익 및 안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 재난·안전 지원시스템 강화 ✓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 강화 ✓ 여성장애인 지원 강화
사회참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정보 접근성 강화 ✓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 ✓ 편의증진·의사소통 지원 강화 ✓ 장애인 정책 국제협력 강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정책 비전도

◆ GDP 대비 장애정책 지출 0.1% 증가했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의 1/3에 그쳐



- 제5차 종합계획 시행기간 중 GDP 대비 장애정책 지출 비율은 '17/0.62% → '22/0.72%(예측치)로 증가
- 하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의 1/3에 그치는 지출 수준
- 최근 장애정책 지출은 현금보다 현물 급여 중심으로 증가
- 최근 5년간 장애정책 지출액은 ('13) 9.6조원 → ('18) 13.8조원으로 4.2조원 증가
- * 시설·재가서비스 2.3조원↑, 산재급여 0.7조원↑, 기타 수당 0.5조원↑

- 장애등급제 폐지와 지원대상 확대



- ▶ 복지·건강 분야
- 장애등급제 폐지('19)로 활동지원 대상 확대, 발달재활서비스 소득기준 변경('19)으로 대상 확대

2 오목찬(2022),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방향과 향후 과제(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제24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 발표



- 10개 질환에 대한 장애인정기준 마련('21),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발표 ('21)
- ▶ **교육·문화·체육분야**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확대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분리('19) 및 확대
- ▶ **경제적 지원 분야**
- '18년부터 장애인연금 목표수급률(70%) 달성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및 근로지원인 대폭 확대
-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19), 근로장애인 전환지원('20) 신설
-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19)
- ▶ **권익·안전·사회참여 분야**
-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신설('20)
- 특별교통수단 보급기준 강화('19), 이동지원 종합조사 도입('20)

- 장애인연금 5만원 인상(30만원) 등 지원수준 현실화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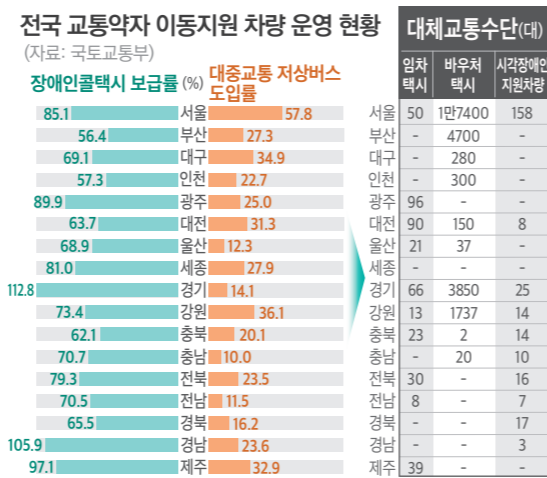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안내자료 ©보건복지부

- ▶ **복지·건강 분야**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및 활동지원 급여구조 개편('19)으로 월평균 급여량 증가, 활동지원 가산수당 상향
- 장애아동 양육지원 돌봄서비스 지원시간 상향
- 발달재활서비스 월 지원액은 계획과 달리 동결
- ▶ **교육·문화·체육분야**
- 통합문화이용권 월지원액 상향('17/6만원 → '21/10만원)
- ▶ **경제적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소득('19), 근로·사업소득('20) 공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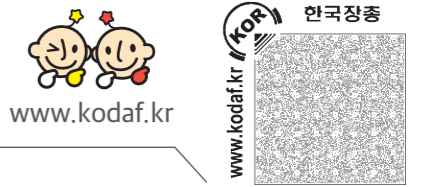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상향('18/25만원 → '21/30만원)
- 장애인일자리 사업 월급여 상향(일반형 기준 '17/135.3만원 → '22/191.4만원)
- 추가비용 보전급여 수준 현실화는 계획과 달리 동결, 장애아동수당은 1~2만원 인상('22)

- 지역사회 시설 및 인프라 확대 노력했지만, 이동편의시설 지표는 하락



전국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운영 현황 ©한겨레

- ▶ **복지·건강 분야**
- 활동지원 제공기간 및 제공인력 확대, 장애인 복지관, 주간보호시설 등 지역사회재활시설 확대
- ▶ **교육·문화·체육분야**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특수학교, 특수학급 등 보육·교육 기관 확대
- 열린관광지 확대
- ▶ **경제적 지원 분야**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대
-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시범사업 실시('22)
- ▶ **권익·안전·사회참여 분야**
- 편의시설 설치율, 적정설치율 향상
- 저상버스 도입률 상승, 이동편의시설 적합설치율(버스, 지하철 등)은 하락



❖ “역대급 예산 투입되었지만 장애당사자 삶의 질 향상은 부족해”



제24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 오욱찬 연구위원 발표(2022.12.7.)

- 지난 12월 7일 개최한 제24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에서 오욱찬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3~2027) 수립 방향과 향후 과제>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제시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특징과 평가결과는 아래와 같음

❖ 제5차 계획, 시민사회와 함께 만들고 문재인 정부 임기에 수립·이행해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첫째, 수립·이행 정부의 일원화되었다는 것과 둘째, 시민사회와 함께 수립했다는 점임
- (수립·이행 정부의 일원화) 과거 종합계획은 전정부 임기 마지막 해에 수립하여 차기정부가 이행하였음(수립·이행 정부의 불일치).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2017년 3월 대통령 탄핵, 2017년 5월 새정부 수립으로 종합계획의 수립 주체와 이행 주체가 일원화되었음(국정과제 발표 → 종합계획 수립)
- (시민사회와 함께 수립) 2017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민주주의와 사회경제적 요구가 분출하는 가운데 장애인 인권·사회보장에 대한 요구 또한 분출되었음. 광장의 요구를 시대정신으로 수용한 새정부에 의해 주요 정책 이슈별로 장애계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가 2017~2018년 중에 운영되었음

-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보건복지부)
- 장애인 탈시설 민관협의체(보건복지부)
- 부양의무제 폐지 민관협의체(보건복지부)
- 장애인 이동권 보장 민관협의체(국토교통부)
-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민관협의체(고용노동부)
- 제5차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요 이슈 반영

❖ 종합평가 1: 투입과 산출에서 눈에 띄는 개선

- 제5차 종합계획 기간 동안 유례없는 큰 폭의 재정 투입, 특히 서비스 분야에 자원이 집중 투입되어 장애정책 지출 연평균 증가액은 최근 5년간 6882억원, 최근 10년간 4867억 원 수준임
- 장애인 지원 대상범위와 인프라가 지속 확대되었으나 지원 수준의 향상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함

❖ 종합평가 2: 삶의 질 향상과의 연계성은 부족

- 통합교육, 학력, 추가비용, 차별인식, 디지털 정보화 수준 등 특정 삶의 질 지표에서 꾸준한 향상이 있었음
- 2020년 이후 악화된 지표는 코로나19의 영향이 혼재되어 정확한 성과 진단 곤란한 상황임
- 하지만 생활만족, 여가, 빈곤, 사회적 관계 만족 등 코로나19와 크게 관련이 없는데도 악화되었거나, 코로나19 확산 이전부터 악화 상태가 확인되는 지표가 존재함

❖ 종합평가 3: 차기 종합계획 수립 및 이행에서의 과제

- 근본적 제도 개편을 내포한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체계’ 등의 과제는 시행이 지연되거나 일부 이행에 그치는 상태로 마무리되었음
- 분야별 사업 발굴도 중요하지만 성과지표를 우선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과업을 설계하는 성과 지향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악화된 삶의 질 지표를 회복하기 위한 계획 수립에 집중해야함



장애계가 장애당사자와 UN장애인권리협약의 눈으로 살핀 평가결과는? ³

- 제5차 장애인정책계획에 대한 평가는 계획 당시 설정되었던 성과목표에 따른 평가와 장애인 당사자들의 만족도 또는 삶의 질 평가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 정부의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에 대한 중간평가는 추진과제별 성과목표의 잦은 변경과 변경에 대한 불명확한 사유 등의 문제가 있었고, 변경된 성과목표에 기반한 평가가 진행되었음
- 또한 성과목표 자체가 장애인의 바람직한 상태 또는 근본적인 원칙에 따라 목표로 설정되지 않은 경우, 장애인을 분리, 배제하는 정책도 계획을 달성하여 잘한 것으로 평가할 우려가 있음
- 이러한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제6차계획 TF가 지난 9월 발간한「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에 대한 보고서」는 장애인 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을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는 UN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하여 정부의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의 진행 상황 및 성과를 정부 정책의 직접 대상자인 장애인 관점에서 분석함

장애계 종합평가 결과 '다소 미흡' 70개 세부과제 중 우수 28.6%에 불과해

- 5차 계획의 수행에 대한 종합 평가 결과는 다소 미흡으로 평가됨

표2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추진 개요

분야	세부과제 평가 (단위: 개, %)		
	우수	미흡	열악
복지 및 건강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3	11	3
교육, 문화, 체육 형평성 제고	7	7	1
경제자립기반 강화	3	7	1
다중적 차별에 대한 권리보장	3	11	0

³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2022),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장애인단체 제안 보고서
⁴ 통합교육 지원 내실화가 아직 충분치 않으나,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는 달성했기 때문에 우수로 평가

동등한 사회참여 기반 구축	3	10	0
계	19(27.1)	46(65.7)	5(7.2)

○: 우수, △: 미흡, ×: 열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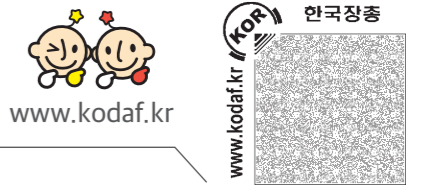
- 70개 세부과제 중 우수한 과제는 19개 과제로 27.1%에 불과하고, 미흡한 과제가 46개로 65.7%로 가장 많음. 열악한 과제도 5개로 7.2%임
- 이를 종합해볼 때 5차 계획의 수행 성과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장애인권리협약(CRPD)에 부합하지 않는 과제도 5개나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한 과제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1 복지 및 건강서비스 지원체계

중점과제	세부과제	평가
장애인 권리보장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장애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종합지원체계 구축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장애판정제도 개선	×
탈시설 및 주거지원 강화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 전환 지원체계 마련	△
	새로운 거주서비스 유형 개발	×
	재가 장애인에 대한 주택지원 강화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확대 및 내실화	△
활동지원 내실화 등 복지서비스 확대	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 확대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확대	△
	로봇을 활용한 장애인 돌봄 서비스 도입	△
	어린이 재활의료 체계 구축	△
재활의료 전달체계 구축 및 접근성 강화	재활의료 전달체계 개편	△
	권역재활병원 확충	○
	보훈대상자를 위한 재활치료 지원 확대	○
	(장애인 건강주치의) 도입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
장애인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을 통한 건강검진 접근성 강화	△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원체계	○

2 교육, 문화, 체육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원

중점과제	세부과제	평가
장애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지원 강화	장애영유아 보육 지원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교육지원 강화	△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 기반 강화	특수교육기관 확충 및 환경 개선	×
	특수교육 교원 증원 및 전문성 제고	△
	통합교육 지원 내실화	○ ⁴



장애인 진로 및 고등·평생교육 지원 강화	장애청소년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전문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내실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	○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수 기회 확대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및 관광·여가 향수 기회 보장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접근성 제고	△
	장애인 영화 관람 접근권 지원 강화	△
	장애인 관광·여가 향수권 증진	○
장애인 체육 향유 기회 보장	재활운동 및 체육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효율화	△
	시설 조성, 지도자 배치 확대 등 거주지 중심 체육활동 지원 강화	○
	재활·복지·교육영역 연계 유형별/대상별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

3 장애인도 더불어 잘 살기 위한 경제자립기반

중점과제	세부과제	평가
장애인 소득보장 급여 개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급여 현실화	△
소득보장과 고용지원 서비스의 연계 강화	소득보장 대상 선정방안 개선 및 전달체계 구축	△
	장애인근로자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고용지원 제도 개편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장애인 소득공제 방식 개선	○
장애인 고용서비스 및 직업재활 지원 강화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제고	△
	장애인 맞춤형 직업훈련 인프라 확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체계화 방안 마련	×
	장애인근로자 중심으로 우선구매제도 내실화	△
장애인 중소벤처 기업 지원	장애인 창업 지원	△
	장애인기업 성장기반 구축 지원	△

4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보장

중점과제	세부과제	평가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강화	△
	장애인 학대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	○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	△
	정신장애인 사회통합 지원	△
장애인 재난·안전 지원시스템 강화	장애인 재난·안전 지원 정책기반 구축	○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경보·피난·안전 설비 기준 강화	○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	장애인 재난·안전 교육 및 대응 매뉴얼 개발·보급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역할 강화 및 개인별 지원체계 구축	△
	발달장애인의 욕구에 기반한 보호·돌봄 체계 강화	△
	발달장애인 성차 권리 및 가족 지원체계 강화	△
여성장애인 지원 강화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협의체 운영	△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양육 지원 확대	△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확대	△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	△

5 동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중점과제	세부과제	평가
장애인 정보접근성 보장	앱, 모바일 앱 등 장애인 정보접근성 보장	△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	△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독서환경 구축	○
	차별 없는 방송접근 및 이용환경 보장	○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	교통수단 확대 및 새로운 수단 개발	△
	여객시설·보행환경의 이동편의 개선	△
편의증진·의사소통 지원 강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활성화	△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 조성	△
	전동보장구 이동지원 확대	△
	장애인 의사소통 보조기기 활용 서비스 지원 강화	○
장애인정책 국제협력 강화	수어통역 통신중계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
	인전전략의 완전한 이행	△
	UN 장애인권리협약 국내이행 강화	△

6 장애인권리협약 미반영 조항 보완해야

- 또한 장애인권리협약의 실제적 권리 중 제10조(생명권), 제13조(사법에 대한 접근), 제15조(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제17조(개인의 고유성 보호), 제18조(이주 및 국적의 자유), 제22조(사생활의 존중), 제29조(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 제31조(통계와 자료 수집) 조항과 관련된 정책이 다소 빈약함

표3 CRPD 조항별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과제

CRPD 조항	과제 수 (개)
전문	1
제6조(장애여성)	2
제7조(장애아동)	-
제8조(인식제고)	1
제9조(접근성)	3
제10조(생명권)	-
제11조(위험 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 사태)	2
제12조(동등한 법적 권한 인정)	1
제13조(사법에 대한 접근)	-
제14조(신체의 자유 및 안전)	1
제15조(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
제16조(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2
제17조(개인의 고유성 보호)	-



제18조(이주 및 국적의 자유)	-
제19조(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통합)	3
제20조(개인의 이동성)	4
제21조(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7
제22조(사생활의 존중)	-
제23조(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2
제24조(교육)	7
제25조(건강)	3
제26조(가할 및 재활)	8
제27조(노동 및 고용)	5
제28조(적절한 생활 수준과 사회적 보호)	7
제29조(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	-
제30조(문화생활, 레크레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7
제31조(통계와 자료 수집)	-
제32조(국제협력)	2

- 이에 따라 누락된 조항과 관련된 정책을 추가해야 함. 특히 사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인의 손상을 없애기보다는 고유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겠음

04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 계획이 나아갈 길과 과제

■ 한국 장애정책을 선진화하기 위한 장기적 안목 필요해⁵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시한 제6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 종합과제(안)을 통해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평등한 일상의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를 비전으로,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제시함
- 한국의 장애정책 기반을 체계화하고 선진국 수준의 장애인정책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가 제시되어야 하며, 아래 총5가지 종합과제로 제시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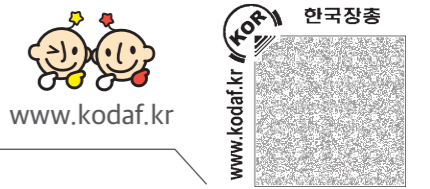
구분	내용
종합과제 1	장애 개념의 현대적 재정의
종합과제 2	장애주류화 및 장애정책 조정 기능 강화
종합과제 3	장애정책 전달체계의 접근성 및 효율성 강화
종합과제 4	장애통계 생산·관리·활용 강화
종합과제 5	선진국 수준의 장애정책 재정 확보

- 위의 종합과제를 바탕으로 종합계획 추진기간(2023~2027년) 동안 한국의 장애정책을 선진화하기 위한 장기적 안목의 설계와 지속적 실행이 이루어지도록 장애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연대가 중요함

● [종합과제 1] 장애 개념의 현대적 재정의

· 추진 내용

- (개념적 정의)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국내를 대표하는 법적 장애 정의로 국제기능·장애·건강 분류(ICF)나 장애인권리협약(CRPD)에 부합하는 정의 제시
- (수급자격으로서의 정의) 사회보장 분야의 장애인 관련 개별법에서는 「장애인복지법」(혹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정의를 준용하거나 해당 분야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재정의하고, 구체적 장애판정 기준을 하위법령 혹은 행정규칙에 위임하여 제시
- (장애판정 개편) 개별법에서의 장애판정 기준은 개인의 손상 및 기능 상태는 물론 ‘환경적 요인’과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마련하되, 소득·고용, 이동, 돌봄 등 영역별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판정 기준과 방법을 연구·개발하고 시범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도입
- (장애인등록제의 점진적 폐지) 이 과정에서 장애인 등록제와 의학적 장애등급(정도)의 적용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궁극적으로 폐지할 수 있는 로드맵 마련



● [종합과제 2] 장애주류화 및 장애정책 조정 기능 강화

· 추진 내용

- (중앙기구) 현행 국무총리 소관의 장애인정책 조정위원회를 대통령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로 격상하고, 장애대표성 강화, 별도 사무국 설치, 심의 범위 확대,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등을 통해 기능 강화
- (장애인정책책임관) 부처별 장애정책 기획·집행 기능 강화, 국가장애인위원회와의 협력관계 설정,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에서 부처간 협력 강화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장애인정책책임관 지정을 의무화
- (지방기구) 지방자치단체의 현행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지역장애인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지역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을 의무화
- (장애주류화) 장애인지예산 및 장애영향평가 도입은 시행체계를 마련하여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점진적으로 도입 추진

● [종합과제 3] 장애정책 전달체계의 접근성 및 효율성 강화

· 추진 내용

- (개념적 정의) 국가장애인위원회에서 사회보장의 범위를 넘어 전 관계부처의 장애정책 전달체계를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접근성 향상 및 효율화를 위한 개편 방향 마련
- (주류 전달체계) 현재 보건복지 분야 공공 전달체계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의 ‘통합사례관리’,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에 장애전담 요원 배치, 장애 목표 설정, 장애감수성 교육 등을 통해 장애 접근성 강화 추진
- (광역 장애 특화 전달체계) 광역 단위에 설치된 장애 특화 공공센터*들의 역할 조정 및 연계 강화를 위한 협의체 운영, 향후 조직적 통합 가능성 검토 및 실행방안 마련

-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지원센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보조기기센터, 장애아동지원센터(예정),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가칭, 예정)
- (기초 장애 특화 전달체계) 장애인전담 민관협의체의 기능 진단 및 개편 방안 마련, 민간 전문기관(장애인복지관, 자립생활센터 등)을 활용한 민관협력 사례관리 강화

● [종합과제 4] 장애통계 생산·관리·활용 강화

· 추진 내용

- 장애통계 생산·관리는 1) 장애 인구 조사 강화, 2) 주류 실태조사에서의 장애분리통계 강화, 3) 장애특화 통계의 효율화, 4)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장애통계 강화의 세 가지 측면에서 강화 추진
- 첫째,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장애출현율 생산을 위하여 유럽연합(EU)의 GALI(Global Activity Limitation Index), 유엔(UN)의 워싱턴그룹(Washington Group) 장애 척도 등 활동제한 장애 문항을 인구조사에 적용 추진
- 둘째, 대표적인 국가승인통계 중 분야별 실태조사(소득, 자산, 지출, 경제활동, 주거 등), 인구집단별 실태조사(아동, 노인 등)에 장애 문항(등록장애 기준, 활동제한 장애 기준)을 추가하고 장애분리통계 생산
- 셋째, 분야별, 인구집단별로 산재해 있는 장애특화 통계의 전반적인 생산체계를 점검하여 신설, 분리, 병합 등 효율화 추진
- 넷째, 장애 분야 사회보장 사업의 월별 모니터링 지표 생산, 장애인 사회보장 마이크로 행정데이터세트 구축, 행정정보 연계를 통한 장애정책 평가 활성화 등 행정데이터 활용 강화

● [종합과제 5] 선진국 수준의 장애정책 재정 확보

· 추진 내용

- 전체 사회정책 영역 내에서 장애정책의 조화를

5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수립방안 연구」실무추진단 제7차 총괄위원회 회의자료(2022.11.29.)



고려하여 OECD의 평균 사회지출 대비 장애정책 지출의 비중을 달성하는 것을 한국 장애정책 재정의 단기 목표로 설정

- '17년 기준 OECD는 평균적으로 전체 사회지출의 10.8%를 장애정책에 지출하고 있어(2.25%/20.783%), 최근 한국의 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 12.287%(19)의 10.8%인 1.33%를 단기 목표로 설정
- 보다 구체적으로, 향후 5년간 매년 GDP 대비 장애 지출 비중을 0.1%포인트 확대하여 2023년 0.8%에서 2027년에는 1.2%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장애계, 장애당사자 의견과 UN CRPD 관점 반영 요구해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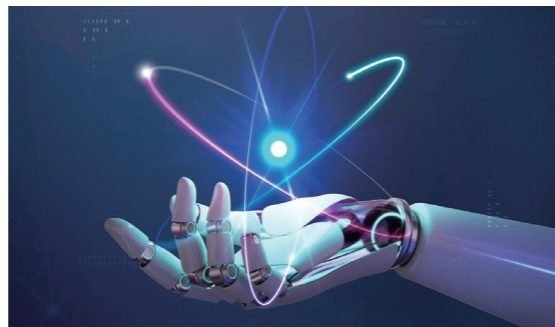
-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향후 5년간 정부의 장애계 정책 방향의 매뉴얼이자, 정부의 장애인 정책 시행 의지를 점검할 수 있는 평가지표임
-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중장기계획 수립 하기에 앞서 장애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공급자 중심' 정책이 아닌 장애당사자의 실제 욕구를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고 다가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겠음. 또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비준 국가로서 정책 실천에 장애인권리관점을 담고 지난 9월 9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발표한 제2·3차 최종권해 결과를 적극 반영해야함

제6차 계획 성공적 이행 위해 장애계와 적극 소통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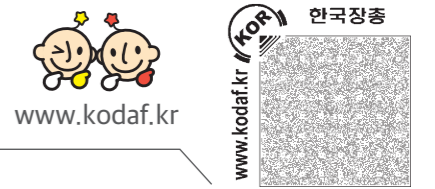
보건복지부, '제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실무추진단 출범 (2022. 5. 30.) ©메디포뉴스

- 정부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특징이자 성과로써 “시민사회와 함께 수립했다는 점”을 내세움. 그러나 2019년 당시 실무위원 회의에서 처음으로 내용을 발표한 후 1주일 만에 장애계의 의견청취 없이 2019년도 시행계획을 졸속으로 처리하려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성공적 이행 위해 민관 소통 지속해야”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비판한 바 있음
- 2022년 12월 현재 정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를 토대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주도의 정부(안) 작성단계에 있음. 23년 1월까지 정책토론회(공청회)를 개최하고, 23년 2월까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최종 심의·의결·발표를 진행할 계획임
-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종합계획 수립에 참여한 장애인 단체의 모니터링 내용을 적극 반영해야겠음. 또한 정부기관 용역에 따른 중간평가 전 단계로 장애인단체가 자체적으로 중간 평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함
- 정부는 장애계가 정부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오랜 파트너임을 인지하고, 진정한 의미의 민관협력이 될 수 있도록 장애계와 협력해야겠음



4차 산업혁명 시대 ©freepik.com

⁶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장애인단체 제안 보고서(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22)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장애인단체 제안 보고서에서는 외부환경변동요인을 찾아내어 현재와 미래에 예상되는 위협과 기회를 예측하는 PEST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향후 5년 이내에 장애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정책적(Political), 경제적(Economic), 사회적(Social), 기술적(Technological) 환경 등과 같은 외부 거시요인 분석함

표4 향후 5년간의 사회 환경변화

정치·정책(political) 요인	경제(economic)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시설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확대 · 장애등급개편 및 장애판정 개편 · 미래대비 복지 욕구의 확대 · 사회서비스원의 역할 증대 · 사람중심실천에 대한 강조 ·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의 증대 · 방역에 따른 사회복지 활동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및 플랫폼 자본주의로의 전환 · 비대면 디지털 경제 활성화 · 국내 경제성장률 감소 · 일자리 규모 축소 · 노동의 불안정성 확대 · 장애인 고용 가능성 저하
사회(social) 요인	기술(technological)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고령화 현상의 지속 및 고령 장애인의 증가 · 소득계층별 소득변화 격차 확대 및 장애인 빈곤 가속화 · 비대면 문화 확대 및 이에 따른 고립 확대 · 디지털 격차 확대 · 기후위기 가속화 및 이로 인한 안전에 대한 욕구 증대 또는 안전한 사회에 대한 지나친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기술 보급의 확대 · 복지서비스에의 사물인터넷 적용 확대 ·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등 행정정보망 활성화 · 돌봄 로봇 활용 증가 · 노동시장 내 기술활용 인력 욕구 증대

- 위 요인 중에서도 탈시설 강화, 장애판정체계 개편, 사람중심실천에 대한 강조, 방역에 따른 사회복지 활동의 제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플랫폼 자본주의와 비대면 디지털 경제 활성화, 고령 장애인의 증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디지털 격차 확대, 안전에 대한 욕구 증대 또는 안전한 사회의 지나친 강조, 복지서비스에의 사물인터넷 적용 확대 등과 같은 요인들이 장애인복지 실천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또 다양한 요인들은 장애인복지 현장에 매우 다양

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현장의 실천도 바뀔 필요가 있음

☑ 장애인 권리에 대한 인식 여전히 부족...UN장애인 권리협약 최종권해 경청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 시행해야⁷



- 대한민국은 국제 조약인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비준 국가임.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6조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음
- 대한민국은 2008년 12월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2009년 협약이 발효되었음. 2011년 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2014년에 1차 최종권해를 받음
- 2018년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다음 보고를 위한 쟁점목록을 정부에 전달하고, 2019년 정부가 제 2·3차 병합국가보고서로 답변을 제출하였으나 코로나19로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2022년에 현장에서 심의가 진행되었고 지난 9월 9일 제2·3차 최종 권해가 발표됨
- 동 발표에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권리협약」상의 장애인 권리에 대한 인식 부족과 협약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 장애인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⁷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2022), UN의 한국장애정책 평가, 숨 가뻐던 10일간의 여정(장애인정책리포트 42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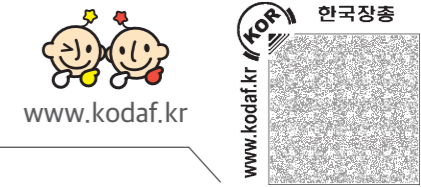
- 1 교차차별(복합차별) 다루는 법 부재 (제5조~7조)**
 - 12(a). 장애인차별금지법률 검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교차차별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2 정부, 성년후견제 폐지 불수용에 대한 강력한 의지 (제12조)**
 - 위원회는 후견제도와 대체사결정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진전과 계획이 없는 정부의 조치를 우려함.
 - 28(a). 대체사결정제도를 지원의사결정제도로 교체할 것
 - (b). 제도를 개혁하는데 있어서 장애인단체의 참여를 보장할 것
 - (c). 지원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접근가능한 형태의 정보를 개발하고 배포할 것
- 3 심리사회적장애인의 자유와 의사결정권 박탈하는 정부 (제14조, 15조)**
 - 32.(a). 자타해 위험과 개인의 손상에 근거하여 비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하는 국내 법률을 폐지하고, 심리사회적장애를 가진 사람의 자유 및 안전에 관한 권리를 회복할 것
 - (b). 자의적이고 강제적인 치료, 특히 격리 강박 치료가 남용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할 것
- 4 협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어, 잘못된 탈시설 정책 (제19조)**
 - 42(a). 장애인단체와 협의하여 로드맵 검토, 충분한 예산 확보와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와 공공의 인식제고 조치 이행할 것
 - (b). 장애아동, 성인을 위한 탈시설 전략 이행 강화하고, 자립생활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이용가능한 서비스 확대할 것
- 마치며: 대한민국, 장애인권리보장의 선두주자 될 수 있을까?**
 - 2023년 대한민국이 장애인복지정책의 양적성장에

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질적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장애당사자의 권리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 살피고,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없는 지 경각심 가져야함

- 특히 탈시설정책이 정책계획에서 시범사업으로 구체화되고 개인예산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현 시점에, 정부는 자체 결과 평가 외에도 장애계와 UN CRPD 최종권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함
- 정부 주도로 수립된 1~4차 계획은 '수요자중심의 정책'이라는 한계를 넘지 못했음. 장애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영된 이번 제6차 계획으로 장애인정책 수립, 시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 시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참여를 확대하고, 통합사회를 구현이 가능할 것을 기대함
- 단순한 통계적 개선이 아닌, 실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계획을 마련하고 성실히 계획을 이행해야겠음

<참고자료>

- 김성희(2018),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현황과 발전 방안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현황과 발전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18년 4월 통권 제258호, pp.62-71
- 오욱찬(2022),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방향과 향후 과제(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제24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 발표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2022),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장애인단체 제안 보고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수립방안 연구」 실무추진단 제7차 총괄위원회 회의자료(2022.11.29.)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2022), UN의 한국장애인정책 평가, 숨가뻐던 10일간의 여정(장애인정책리포트 423호)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비전체계(안)

비전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평등한 일상의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

총괄목표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해소와 삶의 질 향상

분야별 정책 목표 및 추진 과제

종합과제

10대 분야, 35개 중점과제, 118개 세부 추진과제				
장애 개념의 현대적 재정의	장애유류화 및 장애 정책 조정 기능 강화	장애정책 전달체계의 접근성 및 효율성 강화	장애통계 생산·관리·활용 강화	선진국 수준의 장애정책 재정 확보
복지서비스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를 통한 장애인의 보통의 삶 (Ordinary Life)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안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생활 체계 구축 ✓ 누구나 누리는 소외 없고 실효성 있는 적극적 지원체계 구축 ✓ 양질의(고도화된) 서비스 제공 및 맞춤형 통합사례 관리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장애인 자립 지원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의 양적 확충 ✓ 시설장애인 자립 지원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의 질적 확충 ✓ 장애인 지역사회 삶을 지원하는 지원체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 기반 맞춤형 장애인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 장애인 보건의료사업 확대 시행 ✓ 스마트 혁신 기술을 활용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체계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기 발견 및 장애 영유아 지원 강화 ✓ 모든 학생을 위한 특수 교육의 전문화와 공정 교육 실현 ✓ 행복한 삶을 위한 진로·고등·평생교육 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소득보장기능 강화 ✓ 보호고용 및 재정지원 일자리 개편 ✓ 장애인 취업 및 고용안정 지원 ✓ 장애인고용 사업주 지원 강화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및 인적자원 고도화 ✓ 장애인 중소기업 지원
3개 중점과제 10개 세부 추진과제	3개 중점과제 10개 세부 추진과제	3개 중점과제 16개 세부 추진과제	3개 중점과제 9개 세부 추진과제	6개 중점과제 18개 세부 추진과제
디지털·미디어				
디지털과 미디어 향유를 통한 동등한 사회참여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T 기반 사회참여 지원 ✓ 미디어 접근권 보장 강화 ✓ 미디어 교육을 포함한 사용자 디지털 역량강화 ✓ 장애포괄적 ICT 환경 조성(적극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체육 이용 환경 보장 확대 ✓ 수요자 맞춤형 장애인체육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지원 정책 제도화 ✓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정책의 내실화 ✓ 장애예술 지속발전을 위한 기반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에서의 편의시설 접근성 보장 강화 ✓ 교통수단의 질적 수준 향상 ✓ 실효적인 장애인 재난·안전 대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금지과 권리옹호 강화 ✓ 의사소통지원 및 정보 접근성 보장 ✓ 정신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 여성장애인 복지지원 강화 ✓ 장애인 중심의 국제협력 강화 및 국제협약의 국내 이행
4개 중점과제 13개 세부 추진과제	2개 중점과제 6개 세부 추진과제	3개 중점과제 11개 세부 추진과제	3개 중점과제 8개 세부 추진과제	3개 중점과제 8개 세부 추진과제
체육				
장애인의 스포츠 권리 보장 확대				
문화·예술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장애인의 새로운 일상				
이동·편의·안전				
본질적 정책의 연계성 확보를 통한 이동 및 접근성 보장				
권익증진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리보장 강화				

성과 지표

- 복지서비스 통합사례관리 장애인 비율 등
- 주거·자립지원 장애인 대상 공공임대주택 비율 등
- 건강 성인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등
- 보육·교육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수혜율 등
- 경제활동 장애인 빈곤율 등

- 디지털·미디어 디지털 정보 활용 수준 등
- 체육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등
- 문화·예술 장애인 문화예술 관람률 등
- 이동·편의·안전 소규모 시설 편의시설 설치율 등
- 권익증진 장애로 인한 차별인식 등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수립방안 연구」 실무추진단 제7차 총괄위원회 회의자료(2022.11.29.)

월간 한국장총 www.kodaf.kr

발행일 2022년 12월 30일 발행인 김영일 편집인 김동범 창간일 1999년 3월 29일
 제작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4층 T.02)783-0067 F.02)783-0069
 ※ 이 인쇄물의 오른쪽 윗부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보이스아이)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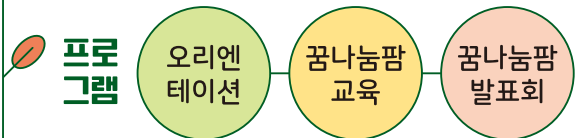
장애청소년 꿈나눔팜



꿈나눔팜이란?

장애청소년이 4차 산업시대에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역·연령에 관계없이 현대사회에서 필수요소인 코딩을 배우고 스마트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대상 전국 특수학교(급)에 재학중인 중·고등학생 200명(40개 학교)



사업기간 2022년 9월 ~12월

사업내용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과 함께하는 장애청소년의 IT역량강화와 4차산업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스마트팜 교육사업

문의 02-783-0067

